



주차장설치비율 낮추기로 재개발지역 옥외주차장

서울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고쳐, 이제까지 50%를 확보토록한 옥외주차장 설치비율을 도심지 재개발구역이나 도시설계안 구역안에서 새로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25%까지로 크게 완화했다.

이는 그동안 높은 옥외주차장 설치비율로 부진했던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가로경관을 높이고 시민휴식공간을 늘리기 위해 건물주가 법정식수면적의 15%를 넘어 20% 이상 초과해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초과면적만큼 옥외주차비율을 낮춰 최저 15%까지 완화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건물주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인건비등을 이유로 관리인을 두지 않아 자동차 진입에 따른 주변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어오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주차장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또 도시설계안 구역내의 신축건물의 경우, 옥외주차장 확보비율만큼을 신축건물 1백개안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했다.

올림픽시설 등 서울시관장 設計 · 建設일괄추진

86「아시아」경기와 88올림픽에 대비한 국립경기장 선수촌 공원등 제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 및 기본설계수립업무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시로 이관됐다.

이같은 업무이관은 최근 체육부 서울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등 관계부

처회의에서 올림픽시설을 기간내에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초 조직위에서 종합계획 및 기본설계를, 서울시에선 건설을 각각 나눠 맡기로 한것을 바꾸어 종합계획의 수립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서울시에서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립경기장 및 선수촌 아시아공원 기자촌등 두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각종시설의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기본설계를 오는 6월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 자문위원회를 지난달 21일 발족시켰다.

서울시 및 체육부 조직위,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인사로 구성된 이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올림픽관련시설의 건설에 앞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본설계에 있어 용역대상자의 선정, 계획안 설계안내용 심사 및 의결, 기타 올림픽관계시설에 관한 자문등을 맡게 된다.

건축과교수 정년퇴직

홍익대 김창집 · 한양대 함성권 교수

홍익대학교 김창집교수와 한양대학교 함성권교수가 울들어 정년퇴임했다.

지난 2월28일 퇴임한 김창집교수는 홍익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동교 건축과를 창설한 주역으로 그동안 많은 건축학도를 길러냈다.

한양대학교 함성권교수도 그동안 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 우리나라 건축계에 지대한 공로를 쌓고 이번에 정년으로 교육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10개 用途지역으로 나눠

全国土地효율화 위해

정부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전국토지를 10개의 단일용도지역으로 새로 지정, 이에 맞춰 개발 및 활용토록 하기로 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말까지 서울과 京畿道 일부를, 내년에는 京畿道 江原 忠南北을, 오는 85년까지는 나머지 지역의 토지에 대해 새로이 용도를 지정키로 했다. 또 기준地價가 고시된 지역가운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이용상황이 현저히 달라진 지역과 地價상승률이 현저히 높은지역, 기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3년범위안에서 地價를 다시 조사, 기준지가를 재고시도록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를 경지 취락 삼림보전 개발 촉진 공업 자연환경보호 관광휴양 수자원보존 도시 및 유보지역 등 10개 용도지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복다기화되어 있는 법규제도 단일화, 지정용도에 맞는 한가지 법만을 적용하는 등 관리체제도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각 용도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등 이용행위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소재지와 반경 5백m 이내 5백명이상 인구가 살고 있는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주거시설 및 녹지지구로 구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 지구에 대해서는 농지개발 택지개발 草地개발 공업용지개발 채광 채석 묘지집단지구로 나눠 개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새로운 용도지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제한, 취락지역에서는 가축 펄프 제지 염색 정유공업 도축업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 및 취급 등 환경을 해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토지이용관리체제를 개편키로 한것은 토지용도가 중복지정되어 있고 규제법이 많아 국토의 효율적개발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토지는 농업 산업 공업 자연 및 문화재보전 도시 및 유보지역등 6개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대, 도로포장 상하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등 사회간접시설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우선 올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계획을 크게 수정, 인구과밀지역인 부산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당초 91만평 계획에서 21만2천평으로 69만8천평 줄이는 대신 성장거점도시인 大田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당초 3만평계획에서 58만1천평으로 20배 늘리기로 했다.

또 역시 성장거점도시인 淸州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규모를 당초 12만평에서 19만3천평으로 7만3천평을, 全州는 20만5천평에서 33만3천평으로 12만8천평을, 光州는 12만5천평에서 19만5천평으로 7만평을 각각 늘려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거점도시주변의 국도포장을 확대하기 위해 5차 세계은행차관도로포장공사 26개노선 1백74km중 연내에 착공할 16개 구간 3백48.6km의 1단계 공사대상지역으로 성장거점도시주변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아시아개발은행차관도로사업 조사지역도 성장거점 도시주변중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지점을 우선 선택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성장거점도시의 하수도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구미등 5대공업도시, 수도권 등의 시설확충이 끝나는 86년부터는 성장거점도시의 하수도시설을 대폭 건설키로 했다.

대형新築建物 안전진단강화 서울시構造심의 의무화키로

서울시는 앞으로 신축되는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도 및 안전진단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축심의의 주안점이 계획과 미관을 위주로 하고 있어 구조검토가 소홀히 되고 있고, 따라서 대규모 민간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가 결여되고 있으며 아울러 초대형 민간건축물의 특수공법에 대한 완벽한 감리가 미흡(현재 감리자

1인) 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의 구조분야 심의를 강화키 위해 구조분야 위원 보강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전검토제를 실시토록 했다.

사전검토제 실시 대상 건물은 11층 이상인 민간건축물로 방법은 준공시 안전진단이 곤란하므로 건축 허가전 도서등록시 건축사협회의 사전검토후 구조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특히 31층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초대형 건축물시공시 구조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의무화토록 했다.

자문단구성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해서 착공신고시 구조전문자문단 명부를 제출케 하고 기초 및 중간층, 옥상층 등 주요공정 시공시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고 준공신고시 자문회의록을 첨부해서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보존지구 韓屋 증·개축 허용 4종 미관지역 대상

서울시는 鍾路區 嘉會 司諫 桂洞 등 한옥보존지구일대를 도시계획법상의 4종미관지구로 지정해 이 지구내 건축물의 증 개축금지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우리고유의 주거양식인 한옥의 건축양식과 생활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적인 한옥이 밀집해 있는 이지역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 이 지구내 모든 한옥의 증 개축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해당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행사가 제약 받게 되는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해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鍾路區 桂花 嘉會 松峴 昭格 司諫 苑西 安國 齊洞 등 9개동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도시계획결정자제를 거쳐 4종미관지구로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記帳 관리 특별지도키로 건축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국세청은 기장능력이 있으면서도 기장을 하지 않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소득표준을 대폭인상한데 이어 이같은 사회지도적업종 종사자들을 전원 올해의 기장지도 우선대상자로 선정, 기장지도 강화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한햇동안 기장대상자 31만8백67명중 54.7%인 17만44명을 기장지도대상자로 지정하고 업종별 표준장부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증인, 집달리, 의사(한의사 포함), 관세사, 건축사, 導船士 등 기장능력이 있는 자유직업소득자들을 우선적 기장지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계속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신고시에 정밀조사반을 투입하여 총수입금액을 철저히 밝혀내는 한편 내년도 소득표준율도 더욱 높여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88.7%가 기장을 않고 추계과세를 받았다.

일부 再開發지역 해재키로 불량주택 改修위해

서울시는 부진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지역의 공원지구 풍치지구 녹지지구 등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1차로 淸雲제 1 지구와 金湖제 1 지구의 공원녹지지구와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확정, 본청과 해당구청에서 각각 공고했다.

도시계획 변경안은 淸雲제 1 지구의 경우 淸雲洞 2, 3 및 산6 일대의 풍치지구 6천2백50평방m와 인왕산공원에 포함된 공원녹지지역 5천6백평방m를 각각 해제하는 것이다.

또 金湖제 1 지구에서는 鷹峰제 3 공원으로 묶여 있던 下往十里洞890일대 3천5백20평방m의 공원지구와 2천6백60평방m의 녹지지역을 해제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